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세션명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 모색		
일시	2017.9.1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소회의실 2
참석자	사회	허광준(오픈넷)	
	패널	민노씨(슬로우뉴스)	구분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정은령(서울대학교 팩트체크센터)	
플로어	약 15명 참여		

워크숍 취지	<p>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가짜 뉴스를 비롯한 디지털 허위정보는 앞으로도 인터넷의 음지로 남아 정상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며 꾸준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p> <p>이에 대하여 사회 각 그룹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단일한 그룹의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p> <p>이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업계, 언론학계, 국회,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그룹이 준비하거나 시행중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 방식을 모색해 본다.</p>
--------	---

1. 팩트체크 (정은령 패널)

- 가짜뉴스를 대응하는 방법 : 팩트체크

(1) 협업 네트워크

- 협업 네트워크 : 서울대는 플랫폼 제공하고 언론사는 팩트체크한 내용을 업로드하며 협업
- 팩트체크의 배경 : 서로 진영마다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므로 이용자는 누가 진실인지 파악하기 힘들
- 언론의 자유를 침해 가능한 국가 기관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주체가 팩트체크 및 공론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그 안에서 언론의 교차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팩트 제공을 위함
- 팩트체크의 이상적인 목표 : 저널리스트들에게 팩트를 체크함으로써 신뢰받는 언론이 되는 것, 이용자에게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수기의 능력을 길러지도록 하는 것

(2) 전문가 모델의 한계

- 팩트체크 모델 : 1. 현재 전 세계적인 팩트체커나 저널리스트 같은 전문가 2.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화된 팩트체킹 3. 대중들의 클라우드 소싱 팩트체킹(위키 등)
- 자동화된 팩트체킹은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 구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시작해서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판단
 1. 기술적 어려움 : 데이터 구축이 안 되어 있음(우리나라는 자연어 처리가 어려움)
 2. 자동화된 팩트체킹을 하더라도 인간의 최종적인 판정이 필수(전문가들의 팩트체킹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
-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사이에서, 우리가 좋은 정보가 없다면 쓰레기통이 될 것

- ex) 2016년 팩트체킹을 했으나 트럼프가 당선됐음. 이용자들의 무력감은 누가 해결하나?
-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대신 팩트 체크를 해 줌

(3) 팩트체크의 중요성

- 기자들에게 있어서 팩트체크의 부가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함
- ex)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언론이 확인해야 함. 전통적인 언론에서 하지 않았던 일
-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올해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 156명 참가, 그만큼 팩트체킹 자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국제 팩트체킹 연대에서의 준칙 : 불편 부담성, 투명성
- 팩트체킹의 그룹 중 워싱턴 포스트의 준칙 : 우리는 좌든 우든 정확하지 않은 발언에 주목하며 불평부담하고 비난과적어도록 노력한다. 팩트체크 이용자들이 팩트체크의 출처에 찾아가서 확인할 때도 정확해야 하고, 당시의 팩트체크가 잘못됐다면 공개적으로 수정이력을 남겨야 한다, 재원도 정확히 밝혀야 한다.
- 불편부담성이나 투명성은 쉬운 일이 아님. 한국 언론은 어떤 쪽으로든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익명인용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들이 보완된다고 하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
- 최근 팩트체크 결과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7월 말에 발표함 : 19대 대선기간의 팩트체크 이용자 중 바람직하다 56%, 신뢰할만하다 46%, 부정적인 의견 15~16%
- 최초 팩트체크 실험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음
- 한국 언론이 시장의 위기,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팩트체크, 팩트체크 수준향상 필요 :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형식실험이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고, 한국 언론의 시장의 위기, 신뢰의 위기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실험과 시도가 될 것

2. 가짜뉴스는 규제 대상인가? (민노씨 패널)

- 가짜뉴스의 시공간의 맥락이 굉장히 중요. 미국의 가짜뉴스와 한국의 가짜뉴스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박정희 시대에 가짜뉴스 논의가 있었다면 그 가짜뉴스는 어떤 형태였을까?
- 가짜뉴스가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의 입을 틀어막는 빌미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1) 가짜뉴스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일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디지털을 통해 글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생산자의 차원에서는 언론인과 아닌 자를 나눌 필요는 없음
- 뉴스를 생산하는 자가 허위정보를 생산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지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데,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드는 가?
-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나 타인의 금전적인 이익의 목적을 위해, 마치 기성의 언론이 만든 것과 같은 외관을 띠도록 만든 콘텐츠를 가짜뉴스라고 정의. 그러한 가짜뉴스 정의의 토대 위에서 거버넌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함
-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의 예(반기문 사례)-> 반기문은 당시의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시민으로써 토론하는 신분이 아니라, 공적으로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진 자, 스스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노출하고 싶은 자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양한 각도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함
- 공적인 자리에서 찍힌 사진들, 말들을 의도적으로 언론에서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적인 인물이 가짜뉴스를 빌미로 해서 본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항변을 인정해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권리,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떤 것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함

(2)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

-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인가? 정보의 유통을 위한 행동인가? 언론과 사업자를 위해서 그러한 것을 입법을 시도하는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입법을 시도하는가?
- 국민의 수준이 높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
- 가짜뉴스가 문제시 되는 대표적인 상황
 1. 선거 :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나 공직선거법 상에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유포죄가 이미 존재함. 아울러 이 법에 한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음
 2. 비선거 기간 : 형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가짜뉴스 콘텐츠를 이미 규제하고 있음. 외국과는 다르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까지도 명예훼손으로 형법 규제가 가능
- 민간의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토론하고 이것을 우리들 스스로 규제하려는 노력은 권장해야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입을 탄압하려는 시도는 막아야 함

(3) 가짜뉴스와 관련된 입법 시도의 예

- 민주당 안호영 의원 ->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30조 정도라는 예시를 들어서 입법시도를 한 적이 있다. -> 잘못된 전제위의 영터리 보고서다. 영터리 보고서를 통해서 입법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 한국 언론에서 영터리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 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 베껴 쓰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런 일은 탈피하고 가짜뉴스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3. 가짜뉴스나 허위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 (구본권 패널)

- 왜 요즘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문제가 되는가?
- 우리는 여전히 허위정보의 세상에 살고 있다.
- 기술과 법으로 가짜뉴스를 막을 수 없을까?

(1) 과거와 오늘날의 가짜뉴스 차이점

- 과거에는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음(유언비어처벌법 등). 가짜뉴스에 한계가 존재했음
- 지금은 가짜정보라는 것을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우리가 상당히 개인화된 도구를 쓰고 있기 때문
- 과거에는 기성 미디어지만, 현재는 개인 미디어 사회이기 때문에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큼
- 가짜뉴스가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음. 예전에는 루머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주목받지 않았음
- 과거에는 메스미디어가 팩트체크 후 방송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오늘날은 마이크를 쥔 사람 조차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게 현실
- ex) 트럼프가 CNN을 가짜뉴스라고 언급함. 해당 사건은 공개 방송으로 중계가 되어버림
- ex) 박근혜 변호인이 가짜뉴스를 가지고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

- ex) 강남구청장은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렸음

(2)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과연 기술로 가짜뉴스가 제대로 걸러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임
- 언론이 보도하는 것이 가짜뉴스인가? 이것은 다른 관점임. 부정확하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을 단순 중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가짜뉴스가 거짓정보를 뉴스의 형태를 포장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확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뉴스기사에서 제대로 된 가짜뉴스는 없음
- 대부분의 가짜뉴스 포털을 통해서 유통됨
- 한국의 가짜뉴스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루머성 정보가 뉴스처럼 포장되어 다니는 것. 조작 정보는 아님
- 가짜뉴스 정보의 폐해라기보다는 허위정보라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음. 가짜뉴스라기 보다는 부실한 정보
- 역설적으로, 우리는 현재 허위정보를 판단하기 가장 쉬운 세상에 살고 있음. 누구라도 어느 때보다 쉽게 정보의 출처와 관련된 사항들의 출처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 도구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농락할 수 있음
- ex) 국정원이 가짜뉴스 최대 생산지였다는 것, 마케도니아 소년들을 비롯해서 미국 트럼프 진영에 디지털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게으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 사기를 막는 방법이 기술과 법으로 가능한 것인가?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임.
- 기술적인 방법과 법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장벽을 높이 쌓고 정교하게 검증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침해사고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좀 더 정교한 사기 기술이 나오게 되어있음. 이것을 기술로 막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듦
- 물론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기술과 법으로 지킬 수 있다고 인정함
- 거짓정보를 과연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가능
- ex)미네르바 헌법재판소 결과, 부분적으로 허위가 담겨있는 정보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 보도를 통해서 100%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정보의 오류에 대해 처벌할 수 없음
- 지금의 가짜뉴스의 문제는 정보를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세력들이 기술과 플랫폼을 악용하는 것
- 디지털과 SNS를 이용할 때 다수의 이용자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인지적 습관 때문에 가짜뉴스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 디지털 시티즌으로써 모든 정보를 쉽게 중계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상황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학교에서 시민의 능력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함
- 가짜뉴스나 허위뉴스의 바람직한 접근방식의 답은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

4-1. 패널 토론 : 허위정보와 뉴스미디어의 역할

- (허광준) 우리가 허위정보를 놓고 생각하다보면 뉴스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협업 네트워크로써 팩트체크 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일상적인 업무는 보도 전에 정확한 팩트체크를 한 후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240번 버스 사례가 확산된 이유는 매체가 잘못된 주장을 뉴스로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언론의 일상적인 작업이외에 제기되는 문제를 선별, 선점함으로써 팩트체크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차원에서 팩트체크의 기본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전은령)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를 동의어로 쓸 수 없다. 저는 뉴스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 기술이 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일상적인 리터러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어떠한 측위이든지 간에 언론매체일 것이다. 학교 교육 이외에 교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 **(전은령)** 미디어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본을 배우는 것이 언론일 것이다. 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실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처럼 글쓰기 규범들이 미디어 안에서도 약화되어있는 것 같다. 기자 생활을 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팩트가 틀릴까봐 전전긍긍한다. 때문에 미디어가 팩트를 함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느슨하게 했던 문화가 있었던 것 같다.
- **(전은령)**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굉장히 잘 쓴 기사이지만 과제의 소스의 이름을 잘못적었다고 F를 줬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엄격하다. AP 뉴스나 각 신문들을 보면 스타일 북이 있다. 하나의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개의 소스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서로 같은 의견이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의견이어야 한다. 이처럼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폴리티 팩트에서 자기들이 만든 체크리스트가 7개 정도 있다.
- **(전은령)** 상업적인 아이템이 아니라 양질의 정보가 돌아야한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구글, 페이스북)조차도 좋은 정보가 없으면 쓰레기통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좋은 정보가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언론에서 규칙들을 못 지키고 있다. 언론에서 사실을 알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2. 패널 토론 : 가짜뉴스와 법률적 제제

- **(허광준)** 인터넷의 기사의 법률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인터넷은 빠르고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르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같은 법률적 장치가 있지만 다른 법률적인 제제가 필요하지 않는가? 가짜뉴스에서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효용이 없는 것인가요?
- **(민노씨)**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전혀 효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법률적인 효용이 있다면 시민사회나 국민에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가 그 법의 효용을 입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모든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법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 **(민노씨)** 인터넷을 통해 정보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 이전의 미디어 환경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임시조치이다. 잘못된 정보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을 포털이 수용해서 즉시 그 콘텐츠를 차단한다. 이것으로 콘텐츠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삭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반사용자가 법률적으로 입증을 위해 시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민노씨)** 법안의 성격이 두 가지 있다. 허위뉴스를 생산하는 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 포털사업자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임시조치는 민간 자율의 방식이 맞지만, 정보통신망법에 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포털의 관리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섷다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그만큼 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성이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에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 **(민노씨)**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담론 시장의 풍성함을 얼마나 약화시키고 있는가? 임시조치 사례를 통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임시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자들이 무엇인가? 돈 있고, 힘 있는 정치인, 기업인들이 가장 많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왔다. 평범한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임시조치가 오남용 되어 왔다.

4.3. 패널 토론 :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법

- **(허광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미디어 사용자의 좀 더 원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다. IT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실행되는 것 같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인 접근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보가 범람하는 사회에 잘못된 정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코딩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나 그것이 실행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입법 활동이나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 **(구본권)** 전혀 아니다. 그동안 신문 활용교육을 했다. 정보를 활용하는 법이나 비교하는 읽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기능적이다. 우리는 정보가 믿을 만한지, 소스가 어딘지, 누구의 의도 때문에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인지 등을 따지는 것을 익혀야지 비판적인 사고력이 길러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서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출처를 찾기 더 애매해질 때 앞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지 못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
- **(구본권)** 우리는 편리한 도구를 쓰면서 비판적 사고 없이 귀차니즘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판적 사고를 가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비판적 사고가 금기시 되어 왔다. Critic이라는 단어의 뜻은 판단에는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되므로 근거 기반한 사고를 말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사고를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토론도 가능하고 주장의 반박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의 경우 인용할 때도 출처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지적인 사회로 업그레이드되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질의

(플로어)

- 기성 언론의 오보, 소스를 확인하지 않거나 어떠한 의도를 갖든지 잘못된 기사에 대한 것과 SNS를 통해서 기사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허위정보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 언론에서의 오보는 언론사 내에서 더욱 규제를 강화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포털이나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서의 대응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허나 오늘 토론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섞여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지 힘들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 서울대 팩트체크가 가짜뉴스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간

영역에서 기존의 언론사와 협업을 해서 특정 영역에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을 수 없는 수단이 아니다.

- 오히려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해야 하는 심층 보도기능, 발굴기능을 스스로 버리고 오히려 다른 언론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 서울대 팩트체크가 상당히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결과는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이버가 포탈에 해야 될 팩트 필터 기능을 서울대 팩트체크를 지원하면서 위탁을 맡긴 것이 아닌가?

(허광준)

- 인터넷 디지털 허위정보에 대한 논의는 거버넌스를 통해 다자간의 노력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한 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늘 패널 분들도 각 영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이다.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 공동의 노력, 그것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하는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계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유로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 오보와 허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이 있다. 언론의 역할이나 책임을 같이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일상적으로 이러한 2가지를 헛갈리기도 한다. 사실 헛갈릴 수밖에 없다. 그 두 부분이 연결적 부분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정은령)

- 서울대 팩트체크의 주체는 서울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직접 팩트체크를 한다. 또한, A 후보가 한 말에 대해서 5개의 다른 언론이 교차검증을 한다.
-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동의한다. 서울대 팩트체크 모델은 일종의 민간자율모델이다. 가짜뉴스는 서울대 팩트체크가 절대로 해결 못한다. 서울대 팩트체크가 시작을 했으니 민간기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미국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

(플로어)

- 저는 서울대학교 팩트체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장시키면 좋겠다. 요새 AI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사용자에게 AI로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설명하면 된다. 인력이 부족하므로 판단은 읽는 사람이 한다. 분산 처리된 결과, 인지 사이언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하면 된다. 앞으로 언론사 등에 펀딩을 많이 받아서 기술 개발을 더 했으면 좋겠다.

(정은령)

- 실시간 팩트체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많이 쌓아나가고 있다.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는 각사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이제 메타데이터로 만들고 있다. 사람과 AI의 실시간 검증 결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